

대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대전지역 총선출마자 유권자가 제안하는 총선공약

2008년 3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18대국회의원총선거특별위원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기독교청년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담당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 042-331-0092-5 / 042-252-6976 / 금홍섭, 문창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18대국회의원총선거특별위원회
‘유권자가 제안하는 총선공약’ 회신 용지

지역구		후보자		작성자		후보와의 관계 (작성자, 후보)		후보서명	
-----	--	-----	--	-----	--	----------------------	--	------	--

분야	요구안	세부설명(p)	채택여부
환경	금강운하를 포함한 한반도 운하 백지화		찬성() / 반대()
	녹지총량제 도입		찬성() / 반대()
	TKP 세천자유소 유류오염정화 및 생태계복원, 지역무상반환		찬성() / 반대()
도시재생	충남도청 청사의 박물관화와 도청부지의 중앙공원 조성		찬성() / 반대()
과학기술	원자력연구소 주변지역 안전망 구축 및 대안수립		찬성() / 반대()
보건·복지·인권	사전예방적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확대		찬성() /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찬성() /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찬성() / 반대()
여성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확대		찬성() / 반대()
	여성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여성 지원강화		찬성() / 반대()
다문화	외국인 이주노동자 복지회관 설치		찬성() / 반대()
	다문화교육 의무화		찬성() / 반대()
교육	학교급식센터 설립		찬성() / 반대()
균형발전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찬성() / 반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시’의 차질없는 건설		찬성() / 반대()
서민경제	대형마트 규제 법안 제정 및 동네시장 활성화		찬성() / 반대()
	교육비 가계부담 경감대책 마련		찬성() / 반대()
노동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찬성() / 반대()
도시교통	안전한 보행환경 확립		찬성() / 반대()
문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재추진		찬성() / 반대()

※각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위 순서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채택여부는 후보의 공약 및 당선 이후 의정활동 적극 반영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분야

환경 1

금강운하를 포함한 한반도 운하 백지화

1. 현황 및 문제점

-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540km, 금강하구둑에서 대전-오송까지 수로를 파는 금강운하 140km, 영산강을 수로로 전화하는 호남운하 83.6km 등 763.6km에 이르는 거대한 수로가 만들어질 계획임. 이조차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운하로 연결할 경우 그 길이는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도서국가로 변모할 것임.
- 근대화, 산업화시대 하천은 인위적 개발의 대상으로 댐 건설과 하천직강화, 하천유역 축소 및 개발 등으로 홍수피해, 유지유량 감소, 생태적 황폐화라는 막대한 생태, 환경적 손실을 감수해옴. 물 관리의 유역화 및 일원화, 이치수+생태적 기능을 복원하는 생태하천복원정책으로 인해 하천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수질이 개선되는 선진국형 하천관리로 탈바꿈하고 있었으나 운하건설은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임.

2. 정책제안

- 한반도 운하계획을 백지화하고 하천의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은 유지하고 인위적 훼손이 극심한 지역은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기존의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유지함. 유역관리를 강화하여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물 길과 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야 함.
- 운하가 물류와는 전혀 관계없고 토건산업을 유지, 확장하는 도구로 전략한 반면, 지역개발이나 관광산업진흥과는 거리가 멀지만 운하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와 생태자원 복원을 위해 금강 등 하구둑을 트거나 선박운행이 가능한 갑문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에서 뱃길을 복원하고 지역산업과 관광자원을 발굴, 활성화하는 방안을 부가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환경 2

녹지총량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대전 동남부지역의 택지개발 및 노은지구에 이어 서남부개발(6,112,271㎡), 학하덕명지구(1,826,000㎡)까지 도시개발이 확대되면서 대전 외곽의 자연녹지훼손이 심각한 수준임. 나아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입목본수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림이나 자연녹지를 상당부분 잠식하는

도시개발 및 건축행위가 빈발함.

- 그러나 대전의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주택보급률도 105%에 이르러 미분양 아파트가 수천 채에 이르고 있음. 집이 부족하지 않은 데 중소규모, 대규모 택지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도시녹지가 잠식되고 주거의 쾌적성은 날로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2. 정책제안

- 시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전체의 녹지의 양과 생활환경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시가화지역의 녹지율을 정해놓고 지역개발을 관리하는 **녹지총량제**를 도입함.
- 녹지총량제는 환경용량처럼 녹지를 확충하는 만큼 개발가능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하는 도구로만 인식되지 않음. 도시전체의 녹지총량과 시가화지역의 녹지총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환경 3

TKP 세천저유소 유류오염 정화 및 생태계복원, 지역무상반환

* TKP(Trans Korea Pipeline) 한국중단송유관 : 포항에서 의정부를 연결하는 총연장 452km의 지하 1.5m에 매설된 송유관으로 1970년 주한미군이 대량 유류수송을 위하여 건설 및 운영됨

1. 지역현황 소개

- 1970년 TKP 건설 이후 2005년 4월 폐쇄까지 35년간 사용, 노후 되어 누유 등으로 인한 오염 심각
- 1월 중순부터 충청투데이의 보도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의 대책활동으로 지역사회 이슈화
- 국방부의 TKP 폐쇄 이행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송유관로 및 저유소 부지 토양오염 기초조사(05년~06년)에서 세천저유소 오염 우려지역으로 드러나 정밀조사(한국농촌공사)를 실시한 결과 송유관 누유 등으로 최대오염도는 5m까지 오염, 부지면적 37,200㎡의 9.6%인 3,570㎡ 오염
 - ▷ 폐쇄저유소 지역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한국농촌공사 2007)
- 유류성분 분석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총 16지점 기준치 초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분석점수 226점 중 35점 “가”지역 기준치 초과
- 지하수 조사 결과 3개 중 2개의 관측정에서 BTEX 성분 중 benzene, xylene 성분이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초과
- 하천이 저유소 내를 통과하여 대청호로 흐르고 있고 부지 내 분포되어 있는 자갈을 포함한 사양토, 사토 등은 투수성이 양호하고 하천방향으로 유향이 형성되어 있어 외부 오염 확산도 우려
- 부지 통과 전후로 생태계 영향 : 수서곤충 및 어류 개체 수 차이 큼

- 책임부처인 국방부는 추가 정밀조사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공개한 조사계획을 보면 조사 지점으로 3지점 선정되어 부실조사가 우려되고 있음.
- 관할 관청인 대전시와 동구청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별다른 행동대응 없음
- 3월 13일 저유소 부지 밖 오염조사 결과, 조사지점 3지점 중 2지점의 토양시료에서 강한 기름냄새와 기름이 섞인 물이 확인되어 부지 밖 오염 확인 됨(조사결과 24일 발표, 조사기관 : 환경관리공단)
- 우선 세천저유소 내 정밀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부지 밖의 오염도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함.
- 또한 국방부 조사에 시의회 및 구의회, 주민,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방법과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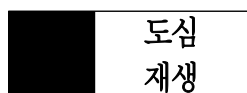
2. 문제점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0년 이상 토양과 지하수가 유류에 오염된 점
- 관리 주체인 국방부와 관할 관청인 대전시, 동구청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점
-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의 실태 파악이 어렵고 국방부가 제대로 할지 의문인 점
- 세천저유소 외 대전충남북 지역의 TKP 송유관 철거 실태 및 오염 파악, 정화 및 복원이 추가로 있는 점

3. 정책제안

- 국방부가 세천저유소 부지와 주변지역 기름오염 실태 제대로 조사토록 해야 함
-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해당지역의 생태적 복원 지원
- 세천저유소 완벽한 정화 및 복원 후 지역에 무상 반환

도심재생분야



충남도청 청사의 박물관화와 도청부지의 중앙공원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충남도청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전적지의 활용에 대한 대전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음. 원도심의 역사와 생활사를 온전히 간직한 대전 근대사의 상징을 보존하고 주변지역을 공원화하여 원도심의 랜드마크

이자 대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특히, 대전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근대건축양식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어 도시 및 건축사 학습에 유용할 전망이다. 도청본청 건물은 대전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만2천평의 부지는 시민 누구나가 와서 즐길 수 있는 중앙공원으로 조성하여 건축물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지는 대전의 명소로 만들어야 하나 본 청사를 제외한 도청부지에 대한 개발압박이 높음.

2. 정책제안

- 도청 청사는 대전의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경찰청을 포함한 부지는 **중앙공원**으로 **재조성**하여 대전의 상징으로 만듦.
- 중앙공원 조성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박물관과 더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가든형 공원을 만들거나 미로공원, 한국적 정원을 원형 그대로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는 방안 등이 있음.

과학기술분야

과학
기술

원자력연구소 주변지역 안전망 구축 및 대안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원자력연구소 내 방사능 누출사고, 원자력 피폭 사고, 대부분 영세하며, 이익을 추구하고
- 사고를 쉬쉬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사항으로 민관 관리시스템과 주변 지역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

2. 정책제안

- 원자력방사능 비상계획구역(현재 반경800m 내외) 대상지 확대를 통한 대전원자력연구소 주변지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함.
- 대전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법적 기구화 하여 정식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함.

보건 · 복지 · 인권분야

보건 · 복지
· 인권 1

사전예방적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평균 부유층은 4일만 아프지만 빈곤층은 20일 동안이나 아프다고 함. 전반적으로 건강수준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불건강이 집중되는 사회·경제적 계층 간 건강의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만성질환에 있어서 1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301만 원 이상의 가구보다 2배나 유병율이 높다고 함. 그러나 현재 압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많은 상태에서는 치료위주의 진료행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수밖에 없음. 또한 도시화된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오히려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들에 대한 저렴하고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적은 상황.
- 이에 노인과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보건서비스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의료취약계층 집중현상을 해결과 사전예방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부터 도시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제기. 당시 전국적으로 도시보건지소 설치가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우리 지역의 경우 중구에 1개소만 설립되었을 뿐 이후 추가로 설립되고 있지 않은 상태. 2006년 기준, 대전시 1개 동에 취약계층 인구수가 2,094명으로 동 평균 인구수의 11.6%이며, 총 79개 동 전체 취약계층 인구는 165,42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등의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그리고 지역주민이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2. 정책제안

- 인구 5만명 당 1개소 기준으로 도시보건지소 동구 4.7개소, 중구 5개소, 서구 10개소, 유성구 4개소, 대덕구 4개소 확대 설치

보건 · 복지
· 인권 2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114가 국민의 각박한 삶과 울분을 푸는 호소의 장이 되고 있음. 그 울분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절망의 표현일 것임. 울분을 존중받고 지지받고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는 사회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울분을 대변해줄 수 있는 공적 기구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몇 개의 지역사무소만으로 전 국민의 인간적 권리를 효율

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인권의 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되어야 하는 속성을 갖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대전의 경우 2004~2006년 3년간 국정감사에서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고 있음.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및 구치소 면전접수 3년 평균 439건, 차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음. 특히 차별시정본부 전국 진정접수 중 대전지역은 전국 5번째로 높으며 우리지역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한 달 상담건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건수보다 12 배나 높은 실정임. 또한 충청지역 민간인권기관의 법적 및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인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임. 따라서 대전지역사무소의 설치에 충청지역민의 인권보호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2008년도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2. 정책제안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법사항이 아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역사무소 설립이 가능.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느냐를 통해 대전 및 충청권의 인권업무를 담당할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수 있을 것임.

보건·복지
· 인권 3

의료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과도한 의료서비스 시장화, 영리화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임.
-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법인과 입김이 세진 민간보험사에 의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2. 정책제안

■ 의료시장화,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

+ 의료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완화 반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본인부담 상한선 현행 200백 만 원에서 100 만 원으로 인하

+ 급여대상 확대 : 비급여 항목 축소 및 비급여 통제기전 마련

+ 선택진료제도 폐지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조정

■ 공공의료기관 확충 / 보건소 및 국공립 병원 확대, 주치의 제도 확립

■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 수가제로 전환. 총액예산제 도입

여성분야

여성 1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함에 반해 사회적, 정책적 기반이 열악한 실정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을 완화시킬 정책적 지원이 필요
17대 국회에서는 산전후휴가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일자리 창출하도록 정책을 진행해 왔으나 여성노동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열악함.
- 제18대 국회에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노동의 사회화 강화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비전통적 여성 직종에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취업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고학력 여성 뿐 아니라 중, 고령 여성, 장애여성 등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함.

2. 정책제안

1) 성, 연령, 장애, 외모, 결혼 지위 등에 따른 차별적 노동시장 관행 척결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강화

- 기간제 보호입법 차별규제 조항의 실효성 제고 등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여성비정규직의 모성권 보장 주력
- 장애인 의무 고용율 확대 강화방안 마련과 50% 여성장애인 고용
-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참여 지원
-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직무분석 및 정확한 실태조사 및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학력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 방안 강화
- 근로시간 제도의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총근로시간 단축 필요

2)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서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 제고 및 모성정책 재원의 사회분담화 확대
-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운영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특별법 제정 및 전자바우처 도입 전면 재검토
- 보육종사자 8시간 노동 확립 등 보육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와 방안 마련
-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견제
-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 제정
-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장 및 유급화 마련
- 보육비용 지원제도를 취업부모가족에 유리하도록 개선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여성 2

여성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여성 지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여성노동자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극복할 방안이 필요. 또한 사회보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급권의 성별 격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의 내실화된 제도가 요구됨. 또한 공적부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여성빈곤, 저소득 여성가족 등 지원이 과제로 남아 있음.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을 강화하여 여성들을 사회보험의 안전망으로 포괄하고 빈곤여성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저출산, 이혼율 증가, 단독가구 및 한부모 가족, 사실혼 가족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 이는 실제적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유형이 사회적 낙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

회적 의식 개선 캠페인,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 등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2. 정책제안

-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여성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여성가구주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 강화
-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통한 빈곤여성가구의 소득 보장
- 빈곤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한부모 가구주의 탈빈곤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및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 지지와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대책 마련

다문화분야

다문화 1 이주노동자 복지회관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국에는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센터는 재정 자립도가 미비한 시민 단체가 대부분이며 지자체 지원에 의해 건립된 지원센터(복지회관)는 경기도 지역에 그치고 있음.

2. 정책제안

-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가 이주노동자 센터(복지관)를 설립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우선 광역권만이라도 이주노동자 센터(복지회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문화 2 다문화교육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8월 정부 통계를 통해 발표되었듯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음. 이를 통해 언론에서는 연일 다문화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혹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한국에 이주해 있는 외국인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충돌을 빚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음.

2. 정책제안

- 다문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우선 광역권부터 그 도시 중심 구역에 다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다른 국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다문화 거리 조성에 관한 예산을 편성.
- 초·중·고·대학 등에서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의무화
- 이주 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교육, 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
- 각 관공서에 이주외국인 상담센터 설치 (통역원 배치)
- 이주민의 날 제정(12월 18일) 및 협약 비준

교육분야

교육 1

학교급식센터 설립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재정자립도 50%미만)상 단 한곳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노은농산물시장, 오정농산물시장에는 식품검사시설이 빈약하여 농산물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에 비해 대전광역시는 극히 소량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시민의 식품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최소한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재료는 전수검사가 필요함.

2. 정책제안

- 학교급식센터는 국비, 지방비를 부담하여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서부, 동부로 나누어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대전의 경우 노은, 오정 시장을 특화하여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여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해야 함.

균형발전분야

균형발전 1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 공장총량제, 대학설립규제 등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규제 법률의 폐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수도권규제철폐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법안의 국회통과를 시도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도권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공세는 강력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등과 관련한 발의 법안만 12개가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와 환경노동위, 산자위 등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재편에서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던 균형발전위원회를 실질적으로는 판권공무원의 원대복귀를 시키는 등 고사시키고 있으며,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충청권을 비롯해 강원권, 경북 북부권 등 수도권규제완화의 수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총선이후 기업유치를 포함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됨.

2. 정책제안

- 수도권 일극집중을 가속화 시키는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 : 수도권규제 관련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공장총량제 완화 정책의 폐기와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그 가치를 높여 수도권을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추진체계를 대폭 축소·약화시킬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을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원의 설치"와 같은 획기적인 방안 마련.
-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균형발전 2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시'의 차질없는 건설

1. 현황 및 문제점

- 행복도시 건설의 핵심수단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지체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분할 반대 등의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행복도시 건설이 무산 또는 축소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충청남도 등 지자체간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8대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큼.
-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은 여전히 수도권 일극집중구조를 완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서의 위상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21C 미래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임.

2. 정책제안

- 대한민국 행정도시 위상에 상응하는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은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해야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자치시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가져야 함.

서민경제분야

서민경제 1 대형마트 규제 법안 제정 및 동네시장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준비 없는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마트의 제한 없는 영업자유 보장은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재래시장의 몰락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 경제의 위축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
- 지역 중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지자체는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를 통해 지역

상권 보호, 자생력 확보, 대형마트와 영세자영업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정부가 1996년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시행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 전환과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 경쟁체제 도입은 지역 유통시장의 균형성장 저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정부는 뒤늦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유통시장 합리화 자금, 시장재개발 지원을 부분적으로 시행했으나 규제없는 재정투입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실질적인 육성대안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특히, 대형마트간의 과당경쟁은 중소제조업체의 출혈납품 강요, 비정규직 중심의 불안정 고용 확대, 연중무휴의 장시간 영업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권 및 가정생활을 침해하는 등 중소제조업, 노동자, 입점 점포주 모두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있음.

2. 정책제안

-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지역유통시장의 공존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활동 규제 /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제도(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 등)를 도입해야 함.
- 지역사회와 대형마트 간 협력증진 / 지역상권 활성화 협력위원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 협력증진, 지역상품 구매비율 및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

서민경제 2 교육비 가계부담 경감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새 정부의 시장 자율화 기조에 따라 앞으로 교육비의 가계 부담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정도로 조사되고 있음.

<표 1> 2007년 사교육비 현황

	총 사교육비 (억 원)	학생 1인당 연평균(만원)	학생1인당 월평균(만원)		참여율 (%)	참여시간 (주당)
			전 체1」	참여자2」		
전체	200,400	266.4	22.2	28.8	77.0	7.8
초등학교	102,098	272.6	22.7	25.6	88.8	8.9
중 학 교	56,120	281.0	23.4	31.4	74.6	8.9
고등학교	42,181	236.8	19.7	35.9	55.0	4.5
- 일반고	38,655	288.3	24.0	38.8	62.0	5.2
- 전문고	3,526	80.1	6.7	19.8	33.7	2.5

자료: 2007 사교육비 실태 조사(통계청)

-
- 1)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
2)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

2. 정책제안

■ 대학등록금 / 대학 재정운용 및 등록금 책정

- +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제도화
- + 적립금 상한제 도입
- +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 책정 및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
- + 등록금 상한제 도입
- + 졸업 후 일정기간이나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학자금을 갚아나가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 +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록금 차등 책정제 도입
-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등록금 심의회 설치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재원마련 실행계획 수립

■ 사교육비

- +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을 통제를 위한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 +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 도입
- +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 +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 징수 시 학원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의 강력한 처벌 제도화
- +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 의무화

노동분야

노동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1.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7년 8월)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3천명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24만6천명(4.5%)이 늘었음. 비정규직 규모의 특징 중 하나는 기간제 노동자가 272만2천명에서 253

만1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 노동자가 13만1천명에서 17만4천명으로, 용역 노동자가 49만9천명에서 59만3천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임.

- 이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계약해지하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해.
-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차별금지제도라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차별시정신청권자’ 및 ‘비교대상’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고 있어 차별시정 기능과 효과를 축소시키고 있음.

2. 정책제안

-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시정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하고, ‘비교대상’ 범위를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노동자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막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도시교통분야

도시교통

안전한 보행환경 확립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에 보행권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OECD국가에 비해 2~3배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스쿨존외에도 생활권역에 대한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및 안전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보행자 사고의 상당부분이 생활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다. 1994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도로폭 9m 미만의 좁은 도로에서 사망자의 68.7%, 부상자의 61.2%가 발생하고 있음.
- 이면도로까지 주차장 확보란 미명하에 자동차 공간으로 전락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
- 인도에 자동차가 주차를 하거나 불법적치물, 노점 등에 의해 보행공간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대규모 공사에서부터 각종 건축공사에 이르기까지 보도폐쇄나 침범은 당연지사로 인식 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음.

2. 정책제안

- 중앙정부에 보행교통과 장애인 교통, 자전거 효통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설치.
- 지방정부 차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및 투자확대.
-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생활도로 전반의 보·차도 구분.
-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의 체계적인 시행.
- 차고지 증명제의 연차적 도입.
-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수요의 집중관리.

문화분야

문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재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21C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또한 문화의 중앙 집중이 극대화되는 작금의 현실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되지 못할 것이며 문화 불균형의 심화로 국가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것임. 이에 지역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을 발의함.
- 발의된 법안에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문화 구성원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주었고 이는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통과된 것을 법사위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기한이 되어 자동 폐기된 법안인데 이는 지역의 수많은 문화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 이에 재차 이 법안을 추진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구축에 나서야 할 것임. 그것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일 것임.

2. 정책제안

- 지역의 다양한 문화발전과 국가 전체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야 함.